‘광주다움 통합돌봄’ 4년차…보편 복지로 확대

정부,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광주시민 77.6%까지 지원 확대

생활돌봄 등 13종 서비스 연계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올해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 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 부담 60%가 적용된다.

광주시는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광주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도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천만원을 포함한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하는 것이 강점이다.

올해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타 지역이 평균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광주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새해 첫 정례조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정례조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포함한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이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정착 원스톱 지원

생활·행정 등 상담…통합콜센터 운영

현장 중심 종합 지원 체계 자리매김

비자·취업·주거 연계 사후관리 강화

전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본원과 동부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교육·정착 지원을 체계화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현장 중심 종합 지원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본원(영암 대불산단)과 동부센터(여수)를 거점으로 서부권 15개 시·군과 동부권 7개 시·군 외국인주민의 상담·교육·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월 개소한 본원은 상담·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동부센터는 지난해 3월 수탁기관 선정 후 여수상공회의소에 설치해 동부권 지원 기반을 갖췄다.

센터는 2025년 11월 말 현재까지 종합상담 1천591건(본원 596건·동부 995건)을 처리하며 생활·행정·노무·의료·주거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또한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주민 지원 통합콜센터(1588-5949)는 전화 1만여건, 문자 2만8천여건 등 총 1만3천76건의 상담을 지원하며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정착 기반을 넓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본원 236명)했으며, EPS 토픽 대비반 등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난해 동부센터에서만 1천764명이 참여했다.

특히 본원은 ‘기관 연계가 곧 현장 해결’이라는 기조 아래 협력망을 촘촘히 했다. 도내외 30여 유관기관과 협약을 하고 이민정책 네트워크 간담회를 운영하며 상담 연계 사후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대학·기업을 찾아가는 지역특화형비자 설명회도 진행해 774명의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기체류 비자 전환과 지역 정착 안내를 강화했다.

동부센터는 개소 첫해부터 ‘찾아가는 상담’을 빠르게 안착시켰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담 995건을 수행했고, 29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했으며 13개국 언어 통번역 인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역대학,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해 의료·노무·교육 등 현장 연계를 확대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026년에는 농공단지·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비자 안내부터 취업 연계·정착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립도서관, ‘슬픔의 틈새’ 등 올해의 책 4권 선정

전남도립도서관은 5일 “도민의 정서 함양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도서는 문학·비문학·청소년·어린이 4개 분야 각 1권씩으로 ‘슬픔의 틈새’, ‘납작한 말들’, ‘파도의 아이들’, ‘행운이 구르는 속도’다.

올해의 책은 도민과 전남지역 도서관 추천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선정위원회 심사와 도민 온라인·현장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올해의 책은 ▲문학 분야 이금이 작가 ‘슬픔의 틈새’ ▲비문학 분야 오찬호 사회학자 ‘납작한 말들’ ▲청소년 분야 정수윤 작가 ‘파도의 아이들’ ▲어린이 분야 김성운 작가 ‘행운이 구르는 속도’다.

전남도립도서관은 선정 도서를 중심으로 3월부터 시·군 도서관과 동네 책방을 순회하며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선정 도서를 대상으로 ‘전남도 독서왕 선발대회’를 열어 도민 책 읽기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 결식아동 급식단가 1만원으로 인상

市, 물가 상승 반영…1만3천여명 혜택

광주시는 5일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급식비 단가를 올해부터 9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최근 물가 상승 등 외식비 수준을 고려해 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급식비 권고단가(1만원)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약 1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전화·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 조사를 거쳐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급식카드를 지원받은 아동은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지역 내 가맹점 약 4만8천여곳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시락 배달이나 지역아동센터 급식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단체 급식 운영 조건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기존 8천500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올해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위해 총 232억원(시비 155억원, 구비 52억원, 시교육청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하나 아동청소년과장은 “성장기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사”라며 “결식 우려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영양 있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